

---

# 서민자산 보호를 위한 보이스피싱 예방 등 3대 분야 대책

---

2021. 12. 2.

관 계 부 처 합 동

## 순 서

I . 추진배경 .....	1
II . 3대 분야 - 10대 핵심과제 .....	3
1. 보이스피싱 .....	3
2. 불법 사금융 .....	7
3. 불법 다단계 .....	9
III . 향후 추진계획 .....	11
[참고] 분야별 정책 대응현황 .....	12

## I. 추진배경

### □ 보이스피싱 + 불법사금융 + 불법다단계 등 3대 불법행위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협하는 **중대한 사회적 문제**

- 3대 불법행위는 전국민을 상대로 한, 재산상 손해를 넘어 일상생활과 생명까지 위협\*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

\* ①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에 이르는 사례 발생  
② 미등록 대부업체가 높은 이자를 요구하며 가족에게 문자 발송, 자택 방문 등 협박  
③ 불법다단계 업체가 판매원에게 대출, 제품 구매, 교육·합숙 강요 등

- 특히,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·서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여 불법행위에 끌어들이는 사례가 증가하여 서민 고통 가중  
- 최근 코로나19 관련 정책융자 등 사칭 사례 → 정부 정책효과 약화를 넘어 금융거래·통신서비스에 대한 신뢰 훼손

#### ※ 피해 사례 예시

- ① **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** : 정부 지원금으로 구성된 긴급자금 대출을 사칭 → 신청서 접수를 위한 URL 클릭시 휴대폰 악성코드 감염, 금융회사 사이트를 모방한 피싱 사이트로 강제 접속됨
- ② **정책융자를 사칭한 불법사금융** : 미등록 대부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 → '정책자금 지원 대출', '저금리 대환대출' 등의 문구를 사용한 스팸 문자 발송

### □ 3대 분야 피해 지속 + 사회 취약계층 대상 **신종수법 증가**

- ① **[보이스피싱]** 계좌이체를 통한 피해는 감소 추세이나, 현금을 직접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사기를 포함한 전체 피해는 증가

<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 (단위 : 억원) >

구분	'16년	'17년	'18년	'19년	'20년	전년비 증감율	'21.상
계좌이체(금감원)	1,924	2,431	4,440	6,720	2,353	△65.0%	845
전체(경찰청)	1,468	2,470	4,040	6,398	7,000	+9.4%	4,351

- 최근 문자·SNS를 통한 원격제어 앱 다운 등 신종 수법 확산, 범죄집단 고도화·거대화로 사전예방·피해구제에 어려움 가중

② **[불법사금융]** 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이자 부담\* 가중 우려 여전

\* 미등록 불법사금융 평균 이자율 46.4%(금감원, '20.11월~'21.1월 실태조사)

- 작년 이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상담 및 제보 건수가 증가하는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

\* 금감원 신고 접수(건) : ('20.上) 3,619 → ('20.下) 3,731 → ('21.上) 4,508

- 특히, '21.7.7. 법정 최고금리 인하(24%→ 20%)까지 감안 시 정책금융상품을 사칭한 피해 사례가 더욱 증가할 가능성

③ **[불법다단계]** 미등록 불법 다단계\* 업체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경찰 고발 사례 지속 → 사회초년생 등 취약계층 피해 우려

\* 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다단계 판매업 등록 의무화

< 불법다단계 수사의뢰 건수 (단위 : 건수) >

구분	'13년	'14년	'15년	'16년	'17년	'18년	'19년	'20년	'21년
수사의뢰	19	25	35	41	39	41	32	17	13

\* 공제조합에 접수된 제보 중 공정위가 수사의뢰한 건수

- 코로나19 이후 합숙·집합교육 제한 등으로 불법다단계가 다소 감소한 측면은 있으나, 비대면 방식의 신종수법\* 확산에 대응 필요

\* SNS를 통해 수입을 허위·과장하여 홍보하는 방식으로 판매원 모집 등

□ 그동안 정부도 3대 분야 피해 방지를 위해 강력히 대응 → But 완전한 척결을 위해 추가적인 보완방안 마련 필요

- 정부도 불법행위 척결 및 서민 생활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예방 - 단속·처벌 - 피해구제 등 3단계에 걸쳐 총력 대응 중

- 수차례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 발표·추진\*으로 상당 수준의 성과를 거두었고, 홍보\*\*를 통해 국민 경각심도 증가[☞참고2]

\* (보이스피싱) 「보이스피싱 방지 종합대책(18.12)」, 「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(20.6)」 등 (불법사금융) 「불법사금융 근절방안(20.6)」, 「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운영계획(21.6)」 등

\*\* 3대 분야별 대중교통 광고, 유튜브 홍보, 대학·노인복지관을 통한 교육 등 추진

- 그러나 정부 대응에 맞추어 범죄수법도 지능화되고 있어 완전한 척결에 어려움 → 정부 대응도 지속적으로 진화 필요

☞ 보이스피싱·불법사금융·불법다단계로 인한 서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방안을 시급히 마련·추진

## Ⅱ. 3대 분야 - 10대 핵심과제

◇ '22년부터 즉시 추진 가능한 3대 분야 10대 핵심과제 선정  
→ 강력한 대응 + 정책 사각지대 최소화로 **서민생활 안정** 도모

### 1 보이스피싱

#### [과제1] 메시지 서비스의 신뢰성 확보 방안 마련

##### □ [현황] 피해자가 메시지의 사칭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

- 전화번호 변작(거짓표시)에 대한 대응체계 既 구축(화이트리스트 관리\* 등) but 신고 前 단계에서 사기문자 대응은 부족\*\*

\* 공공·금융기관 주요 전화번호 목록 → 해당 번호로 거짓표시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차단

\*\* 실시간 보이스피싱 여부 판단에 대한 기술적 어려움 등

- 피해자가 금융기관·공공기관 메시지의 진위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사전적 피해 방지에 어려움

##### □ [대응방향] 진위 확인이 용이한 메시지 서비스 즉시 도입 검토

- ① 다수 국민이 사용하는 SNS의 공식인증 채널을 통해 이용자에게 정보성·광고성 메시지를 송부, 금융·공공기관 등 사칭 방지

\* 다만, 영리 목적의 광고성정보 SNS 수신을 위해서는 별도의 사전동의 절차 필요

- ② 기업형 RCS\*(Rich Communication Services) 등 차세대 메시지 활용

\* 국제이동통신사업자협회가 채택한 차세대 표준 문자 규격으로 다양한 메시지 서비스 제공

- RCS의 경우 발신 기업의 정보 제공, URL이 아닌 메뉴 버튼 등 보다 다양한 기능을 통해 사칭 방지 가능

< RCS와 기존 문자메시지(SMS)와의 차이점 >

구분	RCS	문자메시지
발신자 표시	전화번호+ 브랜드, 프로필 표시(신뢰도 ↑)	발신자 전화번호 표시
제공 기능	메시지 읽음, 버튼 클릭 여부	발송 성공 여부
링크 방식	버튼을 통한 링크 연결(안전성 ↑)	본문 내 링크 포함
소통 방식	양방향 (기업↔고객)	단방향(기업→고객)

⇒ 도입에 따르는 애로사항\*은 있으나, 확실한 피해자 예방 효과를 감안, 금융기관·공공기관 중심으로 적극적 도입 추진('21.12월~)\*\*

\* 모든 휴대폰 제조사가 RCS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상황 등

\*\* 기재부 주관으로 애로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('21.12월~)를 추진하는 한편, 은행·카드사 및 대민업무가 많은 공공기관 등 대상으로 ① 또는 ② 도입 권고

## [과제2] 보이스피싱 등 통합신고시스템 구축

### □ [현황] 여러 기관에서 각각 신고시스템 운영 중

- 피해발생 후 신고 경로가 분산\*되어 있어 피해자가 신고처를 적시 판단하기 어려워 대응이 지연될 가능성

\* 환급신청 : 금감원(1332), 사기신고 : 경찰청(112), 스팸문자 등 신고 : 과기부-KISA(118)

- 현재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스팸문자 신고가 가능하나, 아이폰 등 외산폰 및 RCS 메시지의 경우 문자 신고 어려움

### □ [대응방향] 통합신고시스템 구축으로 신속히 피해 구제

- ① 경찰청·금감원·KISA 등에 동시 신고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 추진
  - 보이스피싱·스팸문자 등 사이버사기 통합 신고체계\*를 마련하고, 중장기적으로 통합 신고번호 신설 등도 검토
- ② 전화번호 외 휴대폰 문자 등 통한 신고시스템 개선 → RCS 신고 기능 개발, 아이폰 등 외산폰에서 신고 가능한 앱 개발('22.3월)

## [과제3] 보이스피싱 사전 예방을 위한 기술 개발

### □ [현황] 사칭 전화·문자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기술 부족

- 보이스피싱 피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보이스피싱 전화·문자 접촉 자체를 사전 차단할 필요
- 발신번호의 위험성을 판단·경고하는 민간 앱이 존재하나, 별도로 앱을 다운받지 않으면 사전 차단에 어려움
  -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개인정보 탈취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도 필요

## □ [대응방향] 보이스피싱 사전 예방을 위한 중장기 기술 개발

- ① 의심전화·악성앱 등을 ①휴대폰 자체 기능으로 1차 차단하고,  
②앱 등 추가 설치를 통해 2차 차단하는 “보이스피싱 백신” 개발

(i) 휴대폰 단말 자체 인공지능 기반 분석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이스피싱을 자동 탐지·신고하는 기술 개발\*

\* 과기부·치안정책연구소(경찰청) 협업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중장기 기술 개발 예정(22년 26억원)  
→ 단말 자체 탐지 인공지능 개발 + 음성·문자정보 등 수사지원 빅데이터 구축 과제 포함

(ii) 민간이 보이스피싱 방지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개발\*할 수 있도록 데이터 공개, 민간개발 앱 구입·활용 등 추진

\* 통신사 등 경찰청·KISA와 협업해 의심전화·문자 차단 시스템 시범운영중(21.2월~), 은행 앱 內 악성앱 차단시스템 구축 등 추진 중

- ② 보안성이 약한 비밀번호를 대체하기 위한 생체인증\* 개발, 휴대폰 내 저장된 비밀번호·개인정보 등 보호 기술\*\* 개발 추진

\* 예) 안면, 홍채, 지문 인식 등 → 행동기반 생체인증 기술 개발 등

\*\* 예) 휴대폰 내 핵심 파일(개인정보 보관장소)에 대한 외부 접근 차단 등

## [과제4]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 확대

### □ [현황] 일부 사기 의심 전화번호는 이용 중지 대상에서 제외

- 전화번호 이용 중지 대상에서 ①대면편취형 사기 이용 번호,  
②스미싱\* 이용 전화번호는 제외\*\*되어, 피해가 확산되는 문제

\* 악성 앱 주소(URL)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

\*\* 계좌이체를 통한 보이스피싱 전화번호는 법상 이용중지 대상에 포함

### □ [대응방향]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 확대 → 피해 확산 방지

-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전화번호, 스미싱 문자를 보낸 번호도 이용중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·제도 개선 추진

- (단기)통신사업자 약관 개정 대상 사업자\* 확대,  
(중장기)법 개정\*\* 등을 통해 이용중지 근거 명확화

\* (현행) 이동전화·유선전화(일부) 사업자 대상 → (개선) 전체 통신사업자로 확대(21.12월)

\*\* 스미싱 이용 전화번호 차단인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 등

## [과제5]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

### □ [현황] 금융위 중심 컨트롤타워 구축 But 협조체계 강화 필요성

- 현재 금융위를 중심으로 “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\*”를 운영하는 등 범부처 추진체계 구축 중

\* 금융위(사무처장 주재), 과기부, 방통위, 법무부, 외교부, 경찰청, 금감원 등

- 보이스피싱 관련 통계·정보 등은 여러 부처에서 각각 관리\* 중

\* 보이스피싱 피해 통계 : 금감원(비대면), 경찰청(대면·비대면 혼합) 등  
보이스피싱 관련 정보 : 사기이용 계좌(금감원), 전화번호(과기부), 사이트·앱(KISA) 등

→ 그러나, 최근 신종 수법 확산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분야간 협조를 더욱 강화 필요

### □ [대응방향] 금융·통신·수사 등 분야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

- ① (컨트롤타워) 금융·비금융에 걸친 모든 이슈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범부처 협의체의 총괄 기능 강화

- TF의 정책조정 및 실무협의 기능 등 측면지원을 위해 기재부 등 참여부처 확대\*

\* TF에 기재부, 복지부(노인), 여가부(청소년) 등 담당국장 추가 검토

- ② (정보공유) 관계부처 간 상시적인 정보공유체계를 구축 → 범부처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통계 등 관리\*

\* 예) 분기별 기관 간 통계 공유, 통계 관리 일원화 방안 검토 등

- 또한, 보이스피싱 범죄 정보를 경찰청·금융위·과기부 등 관계 부처간 공유 활성화

⇒ 문제 발생 시 관계부처 공동 대응(주의보 발령 등)



## 2 불법사금융

### [과제6] 취약계층 피해구제 지원을 강화

#### □ [현황]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 제도 등 운영 중

- 불법사금융 취약계층 피해구제를 정부가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채무자 대리인 무료지원 사업\* 도입('20.1월)

\*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추심행위에 대응, 소송 대리(부당이득반환소, 채무부존재확인소 등), 법률 상담 등 수행

- 다만, 취약계층 피해자가 소송 등에 개별 대응하기는 비용·시간 부담 多

#### □ [대응방향] ①채무자 대리인 지원 사업 확대 + ②공동대응 지원

- ① 취약계층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 확대\*

\* 지원 예산: ('21년) 6.0억원 → ('22년) 11.4억원(정부안)

- ② 다수의 서민 피해자들이 조직화·합동 대응할 수 있도록 동일 불법사금융업자 대상 피해자의 결집 및 공동소송 지원\*

※ 법률구조공단,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등으로 피해 접수 → 법률구조공단이 공동 대응 가능한 사건 선별 → 유사 사건을 일원화하여 지원함으로써 효율성 제고

\* 법령·지침 등 개정 절차 없이 즉시 시행 가능

→ 피해 발생 시 적극·자체 대응이 어려운 서민 피해자 등 대상으로 소송 등 사후 대처 지원을 통해 빠른 일상회복을 독려

### [과제7]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법·제도적 기반 마련

#### □ [현황] 불법사금융업자 처벌 강화 등을 위한 법·제도개선 필요

- 불법사금융업자 처벌 강화 등 대부업법 개정안(정부안)을 국회에 既 제출('20.12월)했으나, 정무위에 계류 중

## □ [대응방향] 불법사금융 이동 방지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 등 추진

- 대부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입법절차 적극 지원

- ① (부당이득 취득제한) 불법사금융업자가 6% 초과하여 수취한 이자를 무효화, 연체이자를 증액하여 재대출 및 계약서 없이 대출한 경우 해당 대출 무효화
- ② (처벌강화)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  
(現: 5년 이하 징역, 5천만원 이하 벌금 → 改: 5년이하 징역, 1억원 이하 벌금)
- ③ (이용자 보호) 추심업자의 계약관계서류 보관의무, 원본 반환의무(요청시) 신설

- 이와 함께, 취약계층 불법사금융 이동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\* 및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\*\*도 추진

\*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법제화 및 인센티브 확충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 추진

\*\* 햇살론15·안전망대출Ⅱ·근로자햇살론 등 '21년 9.6조원<목표> → '22년 10조원대(잠정)

## [과제8] 불법사금융 신종수법에 적극 대응

### □ [현황] 금융지식 취약계층을 타겟으로 하는 신종 수법 증가

- 급전이 필요한 청소년 등 대상으로 내구제 대출\*, 대리입금\*\* 등 신종 수법이 기승

\* '나를 구제하는 대출' : 대출자가 휴대전화 등을 할부로 매입하여 미등록대부업자 등에게 넘기면, 동 업자가 물건을 팔고 판매금액의 일정부분을 대출자에게 지급

\*\* 대리입금 : 청소년 대상 게임머니·콘서트티켓 구매대행 이후 고리로 회수

- 고령층에 대해서도 홍보 등 추진 중이나, 신종수법에 대한 정보 등을 적시에 전달하는데 한계

### □ [대응방향] 신종 수법에 대한 경각심 제고, 단속 강화 등 추진

- ① 경찰청 집중단속 등 불법사금융 집중 신고·단속기간 운영('22.1/4)
- ② 고령층에 대한 교육 강화를 위해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요양보호사와 함께 교육동영상을 시청하는 등의 방안 적극 검토

③ **신종 불법사금융 수법에 대해 그간 접수된 사례 중심 홍보\*** 추진

\* 동영상·카드뉴스 등 시각자료 마련, SNS 활용 및 초·중·고 방문 금융교육 등

- 특히, 신종수법의 경우 피해자가 대출로 인식하기 어려운 데 더하여, 피해자가 불법 범죄 가담자로 오히려 처벌\*받을 가능성 강조

\* 내구제 대출 시 돈을 빌리는 사람의 명의가 대포폰 개통 등에 사용되는 경우 등

### 3 불법다단계

#### [과제9] 신고포상금 제도 등 활용한 시장감시 강화

#### □ [현황] 불법다단계 제보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등 운영 중

- 공정위는 미등록 다단계 등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

\* 공정위는 소관 법위반(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)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함('22년 정부 예산안 31.3억원)

##### ※ 공정거래위원회 신고포상금 제도 관련 규정

- 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 : 공정위는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\*를 신고·제보하고,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 가능

\* 미등록 다단계판매 개설·관리·운영 행위, 강매 등 방문판매법상 금지 행위

- 「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」

- 1) 신고된 방문판매 위반행위에 과징금 부과시, 부과된 과징금의 규모 및 제보된 정보·증거 수준을 고려하여 150만원~1,000만원 지급
- 2) 과징금 미부과시 법위반 행위사실 1개당 15만원~100만원 지급

- 이와 별도로 다단계판매 관련 공제조합\*도 불법 다단계업체 제보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중

\* 직접판매공제조합·특수판매공제조합 중 선택, 신고 건당 50~200만원 지급

- 다만, 가족·지인 등을 통한 피해 발생, 폐쇄적인 불법다단계 운영 등으로 신고가 어려운 한계 → 신고 유인 강화 필요

## □ [대응방향] 공정위 신고포상금 활성화 + 공제조합 포상금 확대 등

- ① 다단계업체 정보공개\* 시 공정위 신고포상금 제도 적극 안내 및 불법다단계 예방 홍보·교육 시 신고 포상금 관련 내용 추가

\* 매년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공개, 매분기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중 (현재는 공정위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해 별도 안내하고 있지 않음)

- ② 공제조합이 운영하는 신고포상금의 경우에도 확대\* 검토

\* 특별 신고·단속기간('22.1~2월) 중 제보 시 포상금 지급 확대 등

## [과제10] 비대면 다단계 등 신종수법 대응 강화

### □ [현황] 비대면 다단계 등 신종 수법 등장 → 국민 경각심 제고 필요

- 코로나19 이후 합숙·교육 등을 통한 전통적 불법다단계는 감소 추세이나, 비대면 등 신종 수법의 다단계 피해 증가

- 이러한 비대면 방식의 불법다단계\*는 피해자가 다단계 여부 자체를 인식하기 어렵고, 온라인 상 교류에 대한 단속에 애로 有

\* SNS를 통해 수입을 허위·과장하여 홍보하는 방식으로 판매원 모집 등

### □ [대응방향] 신종수법을 중심으로 사전 예방, 단속 등 대응 강화

- ① 신종수법을 중심으로 특별 신고·단속기간('22.1~2월 예정)을 지정하여 공정위·경찰청이 집중적인 단속\* 등 추진

\* 신고기간 중 신고 시 공제조합 운영 포상금 지급 확대, 경찰청 집중단속 등 검토

- 접수된 제보 건에 대해 공제조합·지자체·소비자원 등 유관 기관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통해 즉각 대응

- ② 최근 사례 중심으로 불법다단계 소비자 피해주의보\* 발령('22.1/4)

\* '15.2월 이후 첫 다단계 피해주의보 → 주요사례, 예방요령, 신고방법 등 안내

- ③ SNS를 통한 다단계 홍보, 부업이나 플랫폼 마케팅을 빙자한 판매원 모집 등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특화된 안내 메시지 제작

- 대중교통\* 등 노출 빈도가 높은 매체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, 유튜브, SNS, 공제조합 사이트 등 통한 온라인 홍보 강화

\* 지하철 객차 내 홍보물 부착 및 홍보영상 게재

### Ⅲ. 향후 추진계획

- 금번 대책을 통해 발표한 10대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
- 주관기관을 지정하여 분야별 지속적인 동향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시 추가대책 마련

10대 핵심과제	추진 현황·계획	추진일정	담당부처
① 메시지 서비스 신뢰성 확보	▶ 금융기관·공공기관 대상 도입 권고 등	'21.12월 ~	기재부, 금융위, 방통위, 과기부
② 통합신고시스템 구축	▶ 별도 신고 홈페이지 구축 준비(과기부) 등	'21.12월 ~	과기부, 방통위, 경찰청, 금융위
③ 사전예방 기술 개발	▶ 과기부 등 보이스피싱 예방 중장기 기술 개발 ('22년 정부예산안, 26억원)	'22.1월 ~	과기부, 방통위, 경찰청
④ 전화번호 이용중지 확대	▶ 약관 개정 대상 통신사업자 확대 추진 등	'21.12월	과기부, 방통위, 금융위
⑤ 범부처 협조체계 구축	▶ 범부처 협의체에 기재부 등 참여부처 확대 ▶ 부처간 상시 정보공유체계 구축	'21.12월 ~	금융위, 과기부, 방통위, 경찰청, 기재부 등
⑥ 피해구제 강화	▶ 채무자 대리인 무료지원 사업 확대 ▶ 동일 불법사금융업자 대상 공동대응 지원	즉시	금융위
⑦ 법·제도적 기반 마련	▶ 대부업법 개정안(정부안) 국회 정무위 계류중 ▶ 우수 대부업체 법제화 등 제도 개선, 서민금융 공급확대 등	즉시	금융위
⑧ 신종수법 대응	▶ 경찰청 집중단속 추진 등	'22년 상시	경찰청, 금융위, 복지부, 과기부
⑨ 시장감시 강화	▶ 공정위 신고포상금 활성화 등	'22.1월	공정위
⑩ 비대면 다단계 대응 강화	▶ 특별 신고·단속 기간(1~2월중) 운영 ▶ 신종수법 중심으로 특징, 피해유형, 예방요령 등 안내	즉시	공정위, 경찰청

\*   : 보이스피싱,   : 불법사금융,   : 불법다단계

## 1. 보이스피싱

□ **[사전 예방]** 통신수단 및 금융계좌의 사기 이용 방지 등

- ① 통신수단(전화번호, 악성앱 등) 악용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, 사기에 이용된 경우 신속히 이용중지·차단하여 추가피해 방지
- ② 대포통장 개설 및 피해금 인출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,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정보공유(3년)
- ③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모니터링을 위해 금융회사 이상금융 거래탐지시스템(Fraud Detection System) 구축 및 인프라 강화

□ **[단속·처벌]** 수사·단속 강화 + 강력한 사후제재 추진

- ① 보이스피싱 전담 검사·경찰을 지정하고, 불법금융업자 및 통신사업자에 대한 집중 단속 실시, 국내·외 기관과 수사공조 강화
- ② 처벌 및 사후제재 강화\*로 보이스피싱 유인 감소

\* 조직 총책은 피해액과 무관하게 법정 최고형 구형, 단순 가담자에게도 중형 구형 등

□ **[피해 회복]** 「통신사기피해환급법」에 근거하여 피해 구제

- ① 「통신사기피해환급법」에 피해구제 절차를 규정하여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신속히 환급받도록 지원
- ② 금융회사 및 간편송금업자의 피해 방지·회복 관련 의무 강화,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상품 판매 등 추진

□ **[홍보]**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피해사례 홍보 + 수사 경보 발령

- ① 공익광고·문자메시지·유튜브·온라인체험관('20.5월~) 등 활용해 대국민 홍보, 보이스피싱 방지 10계명을 마련하여 배포
- ② 신종 수법 발생시 수사 경보 발령, 코로나19 상황에서 과기부·금융위·경찰청 등 공동 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신속히 대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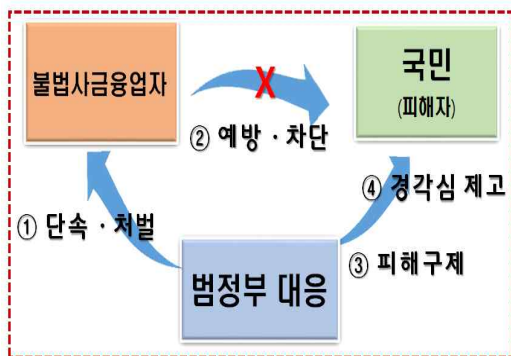
## 2. 불법사금융

- '20.6월 대통령 주재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「**불법사금융 근절방안**」을 마련\*하고 특별근절기간('20.6.29일~연말) 선포

\* ①예방·차단→②단속·처벌→③피해구제→④경각심제고 순단계에 걸쳐 정책추진

- 범정부 TF를 통해 긴밀히 협업·보완해가며 정책 추진

### < 대응구조 >



### < 범정부 대응체계 >



- '21.7월 최고금리 인하\*를 틈타 불법사금융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해 「**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운영계획**」 마련

\* 7.7일부터 24% → 20%로 인하 시행

- 4개월 간('21.7.1~10.30.) 범정부 공조를 통해 강도 높은 일제단속을 실시함과 동시에, **단계별 중점 추진사항** 마련

- ① **[예방·차단]** 정책서민금융·은행 사칭문자, 불법 인터넷광고 등 불법사금융으로의 유인 통로를 적발·신속차단
  - \* 금융·통신 협업을 통한 대응 강화(금융위·방통위·이통3사·은행연 등 실무TF 운영)
  - \* 방통위는 전 국민 대상 "불사금·불법사칭광고 주의 메시지" 7.5일부터 순차발송
- ② **[단속·처벌]** 경찰 및 지자체 특사경 총력대응, 몰수·추징조치 및 연계세무조사를 통한 불법이득 박탈
- ③ **[피해구제]** 전담 상담인력 배치 및 유관기관 핫라인을 통한 법률(채무자 대리인·소송대리 등), 금융(서민금융·채무조정) 등 지원 신속연계
- ④ **[경각심 제고]** 서민접점이 높은 매체(예: 대중교통 래핑광고, 노인복지관·주민센터 리플릿 비치)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주의사항 적극 홍보
- ⑤ **[제도개선]** 불사금업자 6%(상사법정이율) 초과 이자 무효화 등을 포함한 「대부업법」 정부 개정안('20.12월 발의) 국회 통과 추진



### 3. 불법다단계

- 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다단계 사업자는 **등록 의무화**  
→ 판매원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적용 중

※ 다단계판매 : 권유에 의한 판매원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,  
다른 판매원의 거래실적 등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의 판매조직을 통해 판매

#### ※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 금지행위

- ① 후원수당을 판매원들에게 공급한 상품가격 합계의 **35%를 초과하여** 지급
- ② 개별 재화 가격을 **160만원 이상**으로 정하여 판매
- ③ 계약체결을 강요, 계약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위협 등
- ④ 계약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·전화번호 등 변경
- ⑤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**경제적 이익** 지급
- ⑥ 판매원(판매원이 되려는 자)에게 **5만원을 초과한 비용 징수**
- ⑦ 타인에게 **판매원 등록, 상품 구매 등을 강요**
- ⑧ 판매원(판매원이 되려는 자)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**교육·합숙 등 강요**

-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**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**하여  
소비자들이 다단계 판매업자의 적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

- 미등록 불법 다단계업체에 대해서는 **대국민 홍보**를 통한 사전  
예방, 정보수집을 통한 **신속한 적발·수사의뢰** 등 추진 중

- ① (홍보) 대학생, 사회초년생, 노인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불법  
다단계에 대한 피해예방 홍보·교육 강화

- (대학생) 홍보 포스터 및 리플릿을 제작하여 '20년 390여개 대학에 배포
- (사회초년생 등) 지하철 광고, 유튜브·SNS 동영상 홍보 등
- (노인) '15년부터 경로당·노인대학·노인복지관 등에 포스터 배포, 노인잡지 광고

- ② (적발) 다단계판매 관련 공제조합\* 중심으로 불법 다단계업체  
제보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(건당 50~200만원 지급)

\* 직접판매공제조합, 특수판매공제조합 중 선택